

쇠고기 수입 - 정보공개 요구 일고 있다.

지난 한국농어민신문 7월 15일자 (7월 13일발간)의 수입쇠고기와 관련한 기사를 보고 전국의 각지에서 회원농가 및 양축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이번 기사내용을 받아볼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조금 늦음감은 있으나 7월호가 발간된 후라 부득이 8월호 월간지에 이번기사를 발췌, 요약 게재합니다.(편집자주)

1면 수입쇠고기 수익금 「한우」 투자 외면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수입쇠고기로 인한 축산진흥기금이 6천3백30억, 판매수수료가 5백5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한우기반조성의 투자 규모가 극히 미약했다.

연도별 축산진흥기금조성실적에 따르면 지난 ▲88년 59억원 ▲89년 6백78억원(5만톤) ▲90년 1천60억원(8만4천톤) ▲91년 2천3백93억원(12만5천톤) ▲92년 2천5백억원(추정·13만2천톤)등 총6천3백3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진흥기금외에 축협중앙회가 지급받은 수입쇠고기 판매수수료는 지난 ▲88년 14억원 ▲89년 73억원 ▲90년 1백14억원 ▲91년 1백70억원 ▲92년 1백80억원(추정)등 총5백51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13만2천톤의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판매수수료 1백80억원, 도매시장상장수수료(6만6천톤) 1백38억원, 포장육가공이윤 89억(6만6천톤) L/C개설수수료 5억원등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될 수입육총수수료는 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축협중앙회 몫은 2백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축산업계는 특히 『판매수수료외에도 포장

육가공이윤(일부), 상장수수료(일부), L/C 개설수수료등이 지금까지 경비성자금으로 거의 사용됐다』고 지적하고 『축협중앙회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수료를 이용한다면 양축농민들에 대해 도덕성을 상실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업계는 『만약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 경우 축협중앙회 경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한다.

7면 물가시책에 늘어나고 있다.

부족분만 수입 약속 3년만에 거짓탄로

지난 88년 쇠고기수입이 재개되던때만해도 정부는 분명히 「부족분에 한해서만 수입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했다. 미국의 개방압력으로 어쩔수 없이 쇠고기를 수입하되 분명히 부족물량만 수입한다던 정부의 수입쇠고기정책이 이제는 한우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살우정책」으로 돌변해버리고 만것이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올쇠고기 수입적정량을 지난해 수준인 12만

〈쇠고기수입에 따른 정부및 취급기관 부가수입금 내역〉

연도 내용	'91년	'92년(추정)	비 고
관 세	724억 8천만원	800억원	• 환율달러당 800원 기준 • 91년도 총수입가 4억5천만 달러 • 92년도 수입가격 5억달러 추정
축산진흥기금	2,393억원	2,500억원	
수입쇠고기 판매수수료	170억원	180억원	• 총수입 · 판매액의 2.8% • 축협중앙회 지분 • 91년도 12만 5천톤, 92년 13만2천톤
포 장 육 가 공 이윤	74억원 34천만원	89억원	• 91년도 kg당 119원(6만2천5백톤) • 92년도 kg당 135원 적용(6만6천톤) • 축협이 50%, 한방이 50% 취급하고 있음.

연도 내용	'91년	'92년(추정)	비 고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131억 2천5백만원	138억원	• kg당 경락가의 1.5% • 축협중앙회가 일부 지급받음 • kg당 경락가 14,000원 기준 • 91년도 6만2천5백톤 • 92년도 6만6천톤 기준
L/C개설 수 수 료	5억원	6억8천만원	• 총수입가의 0.17% • 축협중앙회 국제부가 독점 개설
합 계	3,498억원 3천5백만원	3,713억 8천만원	• 수수료중 축협중앙회 소유분 • 91년 2백40억원(추정) • 92년도 2백50억원(추정)

5천톤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17만톤을 고집, 농림수산부 요구를 묵살한채 축산진흥기금승인마저 보류했다. 기획원의 요구를 농림수산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금승인을 유보하겠다는 압력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고위층까지 비화돼 결국 13만2천톤으로 결정되었지만 「하반기재조정」이란 단서가 붙었다. 지육과 정육으로 수입된 쇠고기는 총수입량의 50%정도가 도매시장에 상장되고 상장된 수입육은 도매시장의 경매를 거쳐 전문판매점에 공급된다. 전문판매점은 이를 일반정육점과 마찬가지로 자율화된 가격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목심·안심등 특수부위는 거의 한우값과 비슷하게 팔려나간다. 결국 부족한 한우대체품목으로 수입쇠고기가 둔갑되고 있는 것이다. 포장육은 전체수입량의 50%를 차지, 축협중앙회와 한국냉장에서 가공, 민간대리점을 거쳐 슈퍼마켓 전문판매점등으로 공급된다. 포장육은 엄격한 정부고시제로 가격이 정해진다. 이같은 저렴한 포장육은 결국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어 오히려 수입쇠고기 구매를 증동하는 신규수요창출의 역기능을 보이고 있다.

장된다. 이같은 상장수수료는 수입육을 구입하는 전문판매점이 부담하는데, 결국 원가에 포함됨으로써 소비자가 지불하는 셈이 된다. 전문판매점은 다시 20~30%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전문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정육은 경락가에 수수료를 더하고 다시 20~30%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축협중앙회와 한국냉장의 포장육 원료육 배정량은 50대50, 6만6천톤의 포장육 원료육을 3만3천톤씩 각각 맡아 생산한다. 포장육을 생산할 경우 kg당 6백36원의 가공비용을 지급받는데 이중 1백35원이 가공이윤이다. 가공비용은 포장재·전기료·인건비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간 지급된 총가공비용은 4백19억8천여만원으로 이중 가공이윤은 89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수수료 경영에 큰 비중, 축협 인건비등에 충당

축협중앙회의 연도별수수료현황에 따르면 ▲88년 14억원 ▲89년 73억원 ▲90년 1백14억원 ▲91년 1백7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3만 2천톤을 수입할 올 해는 1백8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제반비용을 제외한 수입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은 축산진흥기금에 납입된다. 수입쇠고기에 의한 축산진흥기금납입실적에 의하면 ▲88년59억원 ▲89년 6백78억 ▲90년 1천60억원 ▲91년 2천3백9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7천톤이 늘어난 13만2천톤임을 감안하면 2천5백억원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입쇠고기로 정부는 축산진흥기금을 운용하

8면 **누굴 위한 수입인가.**

축협·한방만 통해 공급, 전문판매점 마진율 30%
도매시장이 없는 도의 경우 도에서 관장, 축협도지회를 통해 공급되고 도매시장이 있는 지역은 직접 상월간농육우/ 92-8-22

고 있는 셈이며 축협중앙회는 총량의 2.8% 수수료와 포장가공이윤(일부)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일부를 지급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축협중앙회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관련직원들의 노무비·관리비등 조수익개념으로 이해돼야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지난 91년 축협중앙회 인건비가 2백60억원정도임을 감안할때 2.8%의 수입쇠고기 수수료(L/C개설·도매시장 상장 수수료, 포장육가공이윤 제외)가 경영에 얼마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수 있다.

우리가 이시점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축협중앙회가 왜 수입육판매권을 독점해야만 하느냐가 아니라 수수료중 일부라도 한우사육기반을 지키는데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쇠고기 율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할때, 포장육 쇠고기 가공이윤 약80억,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약1백50억원, 축협중앙회 수수료 약1백80억원등 수수료만도 약4백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9면 유통실태 대 해부

수입쇠고기는 포장육생산과정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선명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의혹 1:포장육수율을 조작의 가능성

정부는 포장육을 생산하는데 중등육기준 수율을 현재 68.89%로 정해 놓고 있다. 이것은 1백kg 지육(원료육)을 가지고 가공과정에서 68.89kg의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결국 지방이 고기로 환산되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과정에서 지방을 덜 떼어낸채 75kg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6kg은 부정으로 뒷거래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가 인정한 수율검사를 엄격히 실시하지 않으면 이같은 부정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의혹 2:덩어리고기 율출가능성

포장육의 생산과정에서 덩어리째 수입육을 방출시

킬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일부생산공장에서 서류상으로는 5백g, 1kg의 소포장육을 만드는데 포장재, 전기료, 인건비등의 가공비용을 kg당 6백36원씩 지급한다. 이중업체가공이윤을 1백35원씩 인정한다.

만약 포장육을 서류상으로만 생산할 경우 가공비용 일체가 절약되고 덩어리고기는 값을 더받고 뒷거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혹 3:대리점 유통행위 문란

5백g·1kg 소포장육의 10kg상자 공장도가격이 중등육기준 5만원임을 감안할때, 실제 품귀시 거래는 프리미엄이 붙어 6만5천원이상에서 형성될 때도 있다. 일부대리점은 실제 소매상에 포장육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중간상인을 거쳐 다시 납품업자를 통해 실수요자(대량수요처)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의혹 4:현재쇠고기유통은 완전 이원화 돼있다 전문판매점에서는 수입육을 일반정육점에서는 국내쇠고기(젓소포함)만을 취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입육이 한우육으로 둔갑되는 일은 일반정육점(음식점 제외)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일반정육점에 공급하는 경로가 따로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인기도가 높은 목심, 우둔, 설도등은 한우육으로 둔갑될 수 있는 인기있는 부위로써 일반정육점에 공급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10면 한우기반조성 이대로 안된다.

지난 88년이후 쇠고기수입량이 거의 쿼터량보다 배이상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의 부당성을 적나라하게 제기하지도 못하면서 한우사육기반조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는것은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한우기반조성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가.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축협중앙회일 수밖에 없다. 지난 88년 쇠고기수입이 재개될 당시 수입육총판매권을 축협에 위임한 것은 방출물량을 조절, 한우의 적정값을 유지시키면서 국내 한우사육기반조성의 주체적역할을 해달라는 뜻에서 였다. 이같은 중요한 임

무를 부여받은 축협중앙회는 쇠고기 수입재개 5년여 동안 한우기반조성을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기해 왔는가 냉정하게 따져 볼 일이다. 90년도 쿼터량이 5만8천톤인데 수입량은 8만5천톤, 91년은 6만2천인데 12만5천톤이란 엄청난 쇠고기가 수입되는데도 축협중앙회는 과연 이의 부당성을 얼마나 주장했는가. 특히 지난해 1백70억, 올해 1백80억원으로 추정되는 축협중앙회의 쇠고기 판매수수료(도매시장, 상장수수료, L/C개 수수료, 포장육가공이윤제외)는 분명 역할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한우기반조성에 얼마나 투자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6월 쇠고기협상을 앞두고 축산기업조합과 SBS참여문제를 놓고 실갱이를 벌일 때도 축산관련단체나 양축가들이 적극 나서 축협쪽에 성원을 보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축협중앙회가 단지 현행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양축인의 권익단체인 축협이 한우기반조성의 주체로써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와 수수료의 일부라도 축협중앙회가 맡으면 투자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수입쇠고기 취급 수수료가 실제로 축협직원의 봉급으로만 충당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축산관련단체들은 그렇게 큰 성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수수료가 중간에 수입물량 확대로 대폭 늘어나자 축협중앙회는 어떻게 이를 사용했는가. 직원만을 위한 특별보너스로 지급하는데 수수료 전부가 사용됐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한우사육농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축협중앙회는 어떻게 설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축협중앙회가 수수료를 단지 노동의 댓가로만 처분했다면 수입쇠고기 판매권을 보유해야 할 명분이 희박해진다.

쇠고기 수입관련보도, 사실부분 시인과 사과를

한편 우리 협회와 전국농민회 총연맹등 단체들은 이번 기사와 관련하여 보도가 사실이라면 시인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잘못보도되었다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쇠고기 수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편집자주)



성명서

우리 소사육농민은 7월15일자 한국농어민신문이 보도한 쇠고기 수입관련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인지 모르게 엄청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여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우리 소 사육농민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자기의 몫이 무엇인지 아는가? 진정한 우리의 편이 과연 있는 것일까? 등을 자문해 보면서 절망감속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자책하고 있을 뿐이다.

보도에 의하면

1. 쇠고기의 수입량은 부족분만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소비가 촉진되어서 더 많이 들여왔다는 것이다.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급속히 늘리고 판매점마다 최소취급물량을 확보케 하는 방법으로 소비를 늘려왔다는 것과 판매가격을 낮은 수준에 두는 방법으로 소비량을 확대하여 양돈이나 양계까지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정곡을 찌른 지적으로 보인다.

물가정책에 밀려 부득이 했다고 하는 논리만으로는 석연치 않다.

낮은 단가만 유지된다면 아무리 많은 외화가 낭비되어도 상관없는 것인가.

2.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등 수백억원의 돈이 축협중앙회 조직의 운영비나 사기진작비로 쓰여졌을 뿐 그 일부도 소 사육농민을 위하여 쓰여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쇠고기 수입과 처리의 창구를 축협중앙회로 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3. 우리 소 사육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얼마전 축산기업조합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우리 축협을 옹호하여 왔다.

지금도 우리는 위 보도를 전면적으로 믿고싶지 않다. 그러나 그 보도가 확신에 찬 보도요, 자료의 뒷받침이 있는 보도 같게 보이니 그저 지나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어긋남이 있으면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3. 보도에 적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사후대책과 향후 정책을 밝혀야 한다.

4. 앞으로 쇠고기 수입과 관계있는 모든 사람과 기관은 쇠고기의 수입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기 보도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 스스로 공개하여서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다.

만일 단시일내에 이상의 다섯가지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위의 보도가 모두 사실로 재확인 될 것이다.

1992. 7. 14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성명서

최근 물가안정이란 미명하에 무절제하게 들어온 수입쇠고기로 인해 자칫 우리한우의 사육기반이 완전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한우는 한민족의 얼이요, 이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킨 희생양이었으며 농민의 자식을 공부시킨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쇠고기에 밀려 설자리마저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농가경제의 핵이요, 수입개방하에서도 꼭 살아남아야 할 중요한 소득원인 한우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그 기반이 이렇게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 한우비육전업종가일동은 한우를 살리고 한국 축산의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 한우비육전업종가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분연히 일어섰음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최근 한국농어민신문에 게재된 수입쇠고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일백만 양축농가의 대표기구인 축협중앙회가 축산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개방의 방패막이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쇠고기수입 판매 독점권에서 생기는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하는 반농민적 수탈행위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한우없는 축협은 존재의미조차 없을터인데 축협중앙회는 양축농가의 생존과 안위에는 아랑곳 없이 소비확대를 위한 판매망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고 천문학적 수치의 수수료를 한우사육기반등 축산생산기반 조성과 축산부흥을 외면한 채 직원들의 급여 등

의 명목으로 낭비하면서도 겉으로는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이중성에 놀랄 따름이다.

이에 전국 한우비육전업농가의 선도자인 우리는 앞으로 한우비육사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자 하는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축협중앙회는 정부가 수입쇠고기 공급원을 왜 생산자단체에 주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지 입장을 밝혀라.

둘째, 축협중앙회는 쇠고기 수입 쿼터량을 훨씬 넘어선 12만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이유를 밝혀라. 이는 생산자단체인 축협마저도 정부의 물가안정논리에 안주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셋째, 축협중앙회는 지난 4년동안 쇠고기수입에서 얻은 수수료의 사용내역을 밝혀라.

넷째, 축협중앙회가 주체가 돼 한우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다섯째, 지난 6월의 한미쇠고기협상시 축협중앙회의 쇠고기 수입개방확대 저지대책은 무엇이었는가?

여섯째, 정부는 촉진기금의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우리 한우비육전업농가 일동은 위에서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 축협중앙회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1백만 양축농민과 연대해 「축협중앙회 폐지론」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992. 7. 16

전국한우비육전업농가 일동

성명서

지난 7월15일자 한국농어민신문이 폭로한 축협이 쇠고기 수입장사 전모는 농민뿐 아니라 이땅의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농업의 붕괴가 밖으로 부터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농민의 시체더미에 들러붙어 한방울의 피라도 더 빨아먹으려는 반농민적인 정책과 이해집단에 의해 촉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쇠고기 사육기반이 지난 87년 100%자급에서 어찌하여 불과 5년만에 40%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던가?

대개 어쩔 수 없이 외국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입부과금제도를 두어 수입에 따른 판매이익금을 전액환수, 농업에 직접투자하고, 수입관세도 농업투자에 돌리고 있다. 그리하여 가능한 수입은 줄이고 농업생산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려 어떻게든 자급기반을 유지하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수입계약량마저 어기고 초과수입토록 하며, 수입당사자들은 장사에만 집착하여 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외면하여 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은 초지를 늘리고, 사육두수를 소비증가에 맞춰 증가시키며, 우량 한우를 육성하기 보다는 수입 쇠고기 판매망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돼 버렸던 것이다.

농업발전을 위해 42조원을 투자한다면서 농업정책 따로, 물가정책 따로, 단체정책 따로 돌아서는 농업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기회에 농업정책을

생산과 가격정책을 중심에 세우고 수입·물가정책 등은 보조정책으로 두어 일관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협은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농업, 농민과 함께 운명을 함께 할 각오로 내부를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다.

수입쇠고기 판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축협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축협은 한우농가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자 조합으로서의 자기위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정부로부터는 자주적인 조합으로, 내부적으로는 농민 조합원의 요구를 조합원과 함께 조합원의 입장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민주적인 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쌀농사 중심으로 진흥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구조개선 사업을 축산, 과수, 전작, 임업분야에 확대적용하여 농업을 모두 지키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농업에 적용되는 물가정책은 농산물 수입으로 임시변통하던 것을 바꾸어 생산기반 확충과 자급생산에 의한 물가안정을 꾀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수입 이익금을 전액 환수하여 농업과 농민에게 직접 투자하는 수입 부과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축협을 명실공히 생산농민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중앙기구를 축소하며, 정부 간섭을 줄여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축협은 정부 정책의 하부 집행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극복해야 한다.

1992. 7. 16

전국농민회 총연맹